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3면	與 안정화에 강원자치도 성공 출범 탄력 전망	1
CBS	온라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조례 폐기" 촉구	2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통해 산림수도 레거...	3
江原日報	온라인	“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로 만들어야 ” [1/3]	4
ms투데이	온라인	“ 노루목저수지 10여년간 방치는 직무유기”?강원도가 나서...	6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원 49명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탄원 서명	8
江原日報	10면	허영 의원-노인회 춘천시지회 간담회	8
강원도민일보	23면	30년간 지역 인재 육성 앞장 동아서관 장학회 장학금 쾌척	9
江原日報	온라인	김진태 강원지사-지역 경제인 ‘ ESG 도입 ’ 놓고 머리 맞뒀...	10
강원도민일보	23면	김진태 도지사 · 강원출신 언론인 간담회	12
江原日報	04면	철원에 '강원형 자율학교' 설립 추진	12
강원도민일보	06면	"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 아버지 영향력 없었다"	13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RISE 시범사업 고배	14
강원도민일보	18면	도,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올해 상반기 매입	14
江原日報	02면	춘천 봉어섬의 딜레마	15
江原日報	14면	한 달 세번 열리는 태백 통리장 시끌벅적	16
江原日報	11면	원주시 도내 첫 수출 10억달러 금자탑	16
江原日報	10면	윤곽드러난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17
강원도민일보	07면	주말까지 평년보다 따듯... 초미세먼지 주의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반도체연구소 유치 들러리 안 된다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자체 지역제한 입찰제 더 강화해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국민의힘, 이제 혁신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103명 조합장 당선, 막중한 책임감 가져야 한...	22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종합 03면

與 안정화에 강원자치도 성공 출범 탄력 전망

전당대회 참석한 김진태 지사
“4월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탄생하자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에서도 당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안정했던 당내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4월 국회 통과 목표를 이루는 데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전당대회장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김진태 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로 소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6월 출범을 알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김기현 신임 당대표 선

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힘을 합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달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48%도 잘 끌어안고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것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에도 당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한 힘으로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지사와 김기현 대표는 19대 국회의원직을 함께했으며 지난해 김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당시 김 지사는 이재명비리국민검증 특별위원장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함께 이끌었다.

이날 강원도의원 20여명과 함께 전당대회를 찾은 권혁열 강원도의장도 “그동안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수습하면서 국정운영을 비롯해 지역 균형발전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에는 유상범 강원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들과 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 강원권 대의원 350여명이 참석해 새 지도부의 탄생을 환영했다. 고양=이하늘기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조례 폐기" 촉구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내용, 실효성, 절차적 요건 못 갖춰" 논평
대표발의자 이기찬 부의장 "문제부터 제기 바람직하지 못해"



강원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강원도의회 제공 지난 달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예 의장 제도를 향한 이견이 여전하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8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 의장단 일부가 적극 추진했던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명예 강원도지사 조례 운영의 선례나 '기업유치' '의회 홍보' 등 조례의 핵심 사업을 검토해 볼 때 실효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옥상옥 중복 기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허망한 조례를 추진하면서 의회는 물론이고 여당 및 의장단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고 의회 절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강원도의회 스스로가 자신의 위상과 위신을 부정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7일 시작한 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례 폐기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명예의장 제도를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기찬 부의장은 지난 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치열하게 반대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 조율을 거쳤고 본회의장에서도 이의를 묻고 이의가 없다해서 가결됐던 것을 소통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자,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분위기에는 "의장단을 디스(disrespect 준말:상대방 허물을 공개적으로 공격해 망신을 주는 것)하려는 것이고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 뜨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부터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폐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오피니언 19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통해 산림수도 레거시 만들자

의정칼럼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우리 강원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의 4개 시군, 고성군·속초시·인제군·양양군에서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허파, 산림의 도시 강원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메가이벤트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통해 '강원산림수도의 레거시를 만들자'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산림엑스포는 132만명의 관람객유치를 목표로 생산유발 3257억원, 부가가치유발 1443억원, 고용창출 5065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일회성 행사로 그치거나 솔방울전망대와 같은 상징물만으로 산림엑스포의 레거시(legacy·유산)를 창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산림수도 강원'의 레거시 조성을 위한 18개 시·군, 1800만그루 나무심기 강원도민운동' 추진을 제안한다.

최근 우리는 집중호우, 냉해, 산불 등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을 자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인해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합의를 했다.

산림은 지구의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은 우리가 방출하는 탄소의 24~30%를 흡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26억t,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총배출량의 약 6.3%인 연간 4560만t을 흡수한다. 또한 산림은 미세먼지를 흡수해 공기를 정화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나무한그루가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5.7g으로 1ha의 숲은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40.9%까지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한국임학회지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생활권에 숲이 1㎡ 증가하면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도 낮춤으로써 도시열섬(heat island) 현상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산림은 주식, 가상화폐를 능가하는 새로운 투자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로 인해 산림경영시스템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탄소배출권 중 할당배출권(KAU)이 2022년 기준 t

당 2만7000원 선에서, 유럽의 경우 6만5000원 선까지 육박하고 있다. 향후 t당 10만원이 되는 경우, 1ha당 탄소흡수량이 10만톤임을 감안할 때 10ha 임야는 1000만원의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메가이벤트와 산림을 연계한 사례는 이밖에도 많이 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구광역시 400만그루 나무심기로 세계적인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했다. 우리 강원도 또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계기로 삼아 올해 4월 5일 식목일부터 3년간에 걸쳐 '18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강원산림엑스포의 '레거시'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요즘 특별자치도 '풍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내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예정, 올해 2월 15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됐다. 이러다가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듯하다. 강원도의 정체성(identity)과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일환으로 '강원산림엑스포의 레거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이제 숲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하는 최고의 자산이다. 우리 미래의 가치가 산림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환경에 있어서 우리는 지구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하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08일 (수)

종합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로 만들어야”

강원도의회 원제용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통일시대 준비해야”
전찬성 도의원 “장애아 돌보미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
박윤미 도의원 “학교 현장 건강 실무사 호칭 간호사로 변경해야”
양숙희 도의원 “희생 감수한 춘천 강북에 주민 소득 직결 사업 필요”



원제용 도의원

접경지역을 광역연합도시로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찬성 도의원

원제용 도의원(원주)은 7일 개최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접경지역은 남북관계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곳이지만 통일시대를 견인할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며 “접경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을 갖추도록 광역연합도시 형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아시아권에만 존재하지 않는 유엔사무국을 접경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설치 70년 동안 주민들이 규제 속에서 보내온 만큼 희망을 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아 돌보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윤미 도의원

전찬성 도의원(원주)은 “도내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2,233명인데 이들을 지원할 장애아 돌보미는 7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10개 시·군은 1명도 없다”며 “법정 최저시급을 받는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월 특정시간 이상을 근무한 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직무교육 수료 수당을 지원하는 등 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의 도의원

박윤미 도의원(원주)은 “전문 간호사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많은 오해를 받는 ‘건강 실무사’ 호칭을 간호사로 변경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양숙의 도의원(춘천)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희생을 감수한 춘천 강북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한 제317회 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조례안 8건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권혁열 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달 말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집행부는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 의장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벌어진 공무원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권 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공직자는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졸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노루목저수지 10여년간 방치는 직무유기”?강원도가 나서야

진광찬 기자

양숙희 도의원 강북지역 발전 촉구
도시계획보다 주민 의견 수렴 강조
소양8교·소양강댐 문제 거듭 언급
도의회 오는 14일 올 첫 도정 질문



국민의힘 양숙희(춘천6) 강원도의회원이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균형발전에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자유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춘천 동면 노루목저수지 등 강북지역 발전을 위해 강원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숙희(춘천6) 강원도의회원은 지난 7일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북지역 개발을 위해 도 차원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10여년째 무용지물로 전락한 노루목저수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10여년간 춘천시는 (노루목저수지 활용에 대해) 기다리라는 말뿐”이라며 “계획을 세워야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맞지만, 그게 10여년이 넘도록 계획만 세우는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지 용도가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농경사회였던 우리 여건상 가장 중요한 공공재였음은 부인하지 못한다”며 “도는 노루목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청사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한 데 따른 도시계획 대책보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을 포함한 강북 일대에 교육·공연·예술 등 복합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전국적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추곡약수터 재개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양8교 예산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소양8교가 신청사 탈락지역을 잠재우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새를 꼬집은 것이다.

강북지역이 소양강댐으로 50년간 소외되고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도 거듭 촉구했다.

양 의원은 "당시 강북주민들은 15%에 불과한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소양강으로 단절된 지역은 닭갈비·막국수 거리만 있는 춘천의 소외지로 남게 됐다"며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양강댐 인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일부 도의원들은 지난 6일 출범한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에 참여했다. 연구회는 강북지역 피해보상과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활동에 나선다.



지난 7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이날 제317회 임시회를 개최한 도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조례안 8건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린다.

또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 간 권리·의무 설정 동의안'이 상정됐다. 도가 하중도 관광지 부지 환매를 하는 대신 GJC가 자체 매각해 도마 위에 올랐던 2050억원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종합 02면

도의원 49명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탄원 서명

속보=강원도의원들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한 이도현 군 사건(본지 3월 8일자 27면 등)과 관련해 교통사고특례법으로 형사입건된 이 군의 할머니 운전자 A씨의 무죄에 힘을 싣고 나섰다.

강릉지역구 김용래 도의원은 지난 7일부터 동료 의원들에게 강릉 급발진 사고를 설명하고, 도의원 총 49명으로 부터 이도현 군의 할머니 A씨의 탄원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피탄원인인 A씨가 비정상적 가속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8일 “의원들의 탄원 요청이 유가족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지역 10면



허영 의원-노인회 춘천시지회 간담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8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사무실을 방문해 최승민 회장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웅 강원도의원,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김지숙·신성열·나유경 시의원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인물 23면



동아서관 장학회는 8일 원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김제갑 이사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고교생 560명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30년간 지역 인재 육성 앞장 동아서관 장학회 장학금 쾌척

지역 고교생 50만원씩 560명 지원

약 30년간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김제갑 동아서관 장학회 이사장이 올해도 어김없이 장학금을 쾌척, 귀감이 되고 있다.

동아서관 장학회는 8일 원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김제갑 이사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학교 대표 100명을 비롯해, 지역 10개 고교 재학생 총 56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억 8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원주에서 동아서관을 운영 중인 김제갑 대표는 지난 1994년부터 7년간 사재

를 들여 학생 48명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1년에는 장학회를 설립, 지난 29년간 무려 1150명의 학생들에게 6억 29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대표는 원주의 3선 도의원인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의 부친이다. 김 부의장은 역시 동아서관 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 기탁은 물론, 자신의 의정비를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데 환원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내리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갑 이사장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더욱 매진, 후회 없는 멋진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역과 국가의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권혜민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경제

김진태 강원지사-지역 경제인 'ESG 도입' 놓고 머리 맞댔다

한국은행 '강원도 중소기업 ESG 현황과 과제' 설명회 개최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8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대강당에서 지역경제인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중소기업 ESG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8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대강당에서 지역경제인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중소기업 ESG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해 지역 경제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8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대강당에서 '강원도 중소기업 ESG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는 ESG 경영 모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연에서는 양오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 및 추진 과제'를 주제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ESG 활동은 저조한 편"이라며 "ESG가 생존을 위한 전략 가치인 만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발표에 나선 박재희 월드케미칼 대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환경과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을 진행했다"면서 "환경 부문에 집중 투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강연에 앞서 김진태 지사는 축사에서 "ESG 경영은 도내 기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양한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은 인사말에서 "ESG 경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존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강연을 마친 뒤 양오석 교수는 참석자들과 ESG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을 가졌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김진태 지사와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허인구 G1 사장 등 지역 경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인물 23면



김진태 도지사·강원출신 언론인 간담회 김진태 도지사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차원의 도출신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사회 04면

철원에 '강원형 자율학교' 설립 추진

도교육청 군사용 드론·정보시스템 등 접경지역 특성 반영
김화공고 전환 방안 염두... 특별자치도 출범 후 탄력 전망

강원도교육청이 철원에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자율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하고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이에 따른 학교 설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8일 "군인 자녀들을 위한 기숙형 사립고 한민고처럼 철원에 접경지역 여건을 살린 학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처럼 강원도만의 특성을 살린 '강원형 자율학

교'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형 학교를 설립해 자체적인 교과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군사용 드론이나 AI 등 첨단 군사정보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진로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해 개교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신 교육감은 김화공고를 '강원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항공고로 전환한 태백기계공고를 비롯해 반도체학과 신설 및 교명을 변경한 미래고(원주공고), 반려동물케어과 신설과 함께 교명을 바꾼 강원생명과학고(소양고) 등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작업이 성공을 거둔 만큼 이와 비슷한 절차를 통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원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염기호(국민의힘·철원) 의원은 "김화공고를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가칭)로 학교명을 개편·전환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과와 국방드론전자과 등의 학과를 개설하

고 학급별 30여명의 정원을 모집해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이후 추진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개정안 통과를 우리나라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종합 06면

“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 아버지 영향력 없었다”

도교육청, 심의과정 절차 확인

학폭 종합대책 수립 제도 개선

속보=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강원도 내자사고에 재학하던 당시 동급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학교폭력(본지 3월3일자 4면 등)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8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차담회에 서정 변호사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과 관련해 징계 심의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 등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를 할 때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접수되지 않는다”면서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 등 신뢰성 있

는 자료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신분이 알려졌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조정위원회만 진행돼 거기까지는 유추할 수 없다”라며 “모든 절차는 매뉴얼대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경호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문제를 살펴보니 피해학생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사까지는 염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추후 교육부가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 이에 더해 강원도 현장에 맞는 종합 대책을 추가해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종합 01면

강원도 RISE시범사업 고배

<지역혁신대학지원체계>

**지자체 대학 예산집행 권한 부여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사업
교육부, 전국 7곳 선정 강원 탈락
일부 대학 “강원도 소극적” 지적**

속보=강원도가 정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라이즈) 시범 사업에 도전(본지 2월22일자 4면)했으나 탈락했다. 더욱이 강원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다는 지적 도제기, 강원도와 도내 대학 간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RISE’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각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 육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당초 5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 14개 시·

도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13개 지자체가 지원하자 선정대상을 7곳으로 늘려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이다. 시범 지자체는 지자체 내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연내 설치하고, 지역 내 RISE 사업을 관리할 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사업 신청 마감일인 지난 달 21일 교육부에 시범지역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이를 두고 강원도의 준비가 타 지역에 비해 미흡했다는 지적이 도내 대학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북의 경우 10년간 대학·지역·산업혁신 분야에 지방 정부 가용재원의 10%인 도비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대구도 총사업비 2966억 5000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강원도도 산학협력 활성화 위한 지원 775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제안

하는데 그쳤다. 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강원도가 지원 가능한 것 위주로 적극 대응했다. 2025년 권한 이양 전까지 준비하겠다. 향후 과단위로 담당 부서를 만들 생각이다”라고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도내 한 대학 총장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강원도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특별하게 준비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제 도내 대학들의 관심사는 글로벌 대학이다. 정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 각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사업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벌써 준비가 치열하다.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의 ‘1도1국립대’를 글로벌 대학 모델로 제시할 예정이며, 다른 대학들도 학교별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글로벌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각 대학의 혁신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 했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지역 18면

도,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올해 상반기 매입

**속초시, 주민 대상 사업 설명
9년째 ‘개점휴업’ 법원 경매
도 매입·시 리모델링 등 조치**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이 9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중 매입을 추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속초시는 8일 동명동성당 대강당

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소통간담회를 열고 동명동 지역 현안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강원도 매입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속초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북방항로 운항선사였던 동춘항운이 지난 2000년 건축했다.

지난 2014년 6월 스테나대아라인의 북방항로 선박운항이 적자누적으로 중단된 후 소유권이 K크루즈로 매

각됐지만 항로재개가 불발되면서 9년째 폐허시설처럼 방치된 상태다.

특히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한 항만부지는 국가 소유인 데 반해 건물은 개인 소유로 24시간 이뤄져야 할 보안·검색업무가 민간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행, 항만보안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지만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시는 도가올 상반기 중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하면 건물안전 진단 및 리모델링 등 후속 조치 관련 국비 등 재원 확보와 신규선사 유치 및 항로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가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하게 되면 ‘타항만 대비 항만보안 공백’이라는 단점이 사라지게 된다”며 “추후 해수부, 강원도와 협력해 내실있는 카페리 신규선사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종합 02면



◇춘천시 의암호 봉어섬에 조성된 태양광발전단지.

춘천 봉어섬의 딜레마

“케이블카 경관 해친다” 태양광단지 철거 목소리에
도, 매년 30억 수익이 보장되는데 포기 어려워 고민

강원도가 춘천시 의암호 봉어섬에 조성된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춘천 삼악산케이블카 개장 이후 태양광단지가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봉어섬이 각종 환경규제로 개발이 어렵게나 민간사업자 임대 종료되는 2028년부터는 강원도가 직접 연 30억원의 수익을

**2027년 무상임대 종료 이후
10여년간 200억 이상 수익
규제로 개발도 쉽지 않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봉어섬은 1969년 정부가 춘천 호반관광지로 지정했으며 1993년 외자 유치를 위한 제방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장기간 방치됐다.

건폐율 7% 적용으로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자체 오수정화시설도 설치 불가능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강원도는 2007년 민간사업자와 태양광개발 협약을

체결, 2012년부터 전력을 생산 중이다. 발전단지는 민간사업자가 조성해 강원도에 기부채납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강원도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은 상태로 전력 판매금의 4.3%를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다.

무상임대는 2027년 8월31일 종료된다. 이후에는 2027년 9월부터는 강원도가 태양광발전 단지를 직영할 수 있다.

임대 종료 후 강원도의 예상수익은 2027년 11억2,000만원, 2028년은 33억2,900만원, 2029년 32억9,6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2036년까지 운영 시 강원도에 203억원 이상의 수익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춘천시 등이 봉어섬 발전단지 철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개발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케이블카 경관만을 위해 연 30억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하기는 어려워 강원도의 고민이 깊어진다. 다만 강원도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발전단지 철거 결정 시 비용은 사업자 측이 부담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강원도에 발생하게 될 연 30억원의 발전 수익을 상회하는 개발계획이나 대안이 있다면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면서도 “봉어섬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한 달 세번 열리는 태백 통리장 시끌벅적

매달 5·15·25일 열려 전국서 관광객 수천명
산골 불구 어물전 유명 고원 장터 이색 체험 다채

태백 통리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달 5일, 15일, 25일, 끝자리가 5로 끝나는 통리 장날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관광형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통리장은 통리역 인근 사통팔달 자연마을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500여m에 걸쳐 장터가 형성되며 300여명의 상인이 장을 펼친다. 마을 골목을 중심으로 장이 서니 집 앞에 난전을 펼쳐놓고 장사

하는 주민들도 많다.

시골맛이 물씬 나는 통리장은 동해 북평장에 이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큰 재래 시장이었다.

통리장이 있는 통동은 삼척과 울진에서 태백으로 들어가는 동쪽의 작은 산골 마을로 1940년에 통리역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역 주변에 장터가 형성됐다. 산나물, 제철 과일과 채소, 농산물, 약초, 농기구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된다.



◇태백 통리장이 새봄을 맞아 장날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통리장은 산골에 개설된 시장이지만, 어물전이 유명하다. 동해, 삼척에서 잡은 싱싱한 활어를 비롯해 통영에서 올라온 해삼과 멍게, 보성의 바지락과 꼬막, 서해안의 대하, 부산의 어묵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다양한 해산물

을 판매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해발 700여m의 고원 장터에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이색 경험을 선사한다.

울진에서 가족과 함께 장을 찾은 이모(60)씨는 “통리장은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해 경북에서도 유명하다”며

“특히 산중 난전에서 사먹는 활어는 최고의 별미였고 상인들의 인심도 좋아 통리장 구경 그 자체가 최고의 웰빙이다”고 말했다.

최명식 태백문화원장은 “통리는 한때 대형광업소 3개가 밀집한 국내 대표 탄광촌이었으나 2008년 한보탄광 폐광, 2012년 영동선 철도 노선변경 등으로 역이 폐쇄되며 공동화가 심화됐다”며 “하지만 통리장이 열리는 날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만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백=김광희기자

원주시 도내 첫 수출 10억달러 금자탑

지난해 수출액 2021년 대비 7.5% 증가
시 “수출 경쟁력 강화·전략적 판로 지원”

【원주】코로나19 확산세 등 경제 위기 속에서도 원주시 수출이 10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8일 원주시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지역 수출기업의 총 수출액 규모는 10억 3,7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년(9억6,400만달러)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 평균 6.1%를 크

게 웃도는 성과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연간 수출 실적이 10억달러를 넘긴 것도 원주가 최초 사례다. 같은 기간도 전체 수출액은 27억달러로, 원주시가 도내 수출의 37.0%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지난해 수출 실적 2억7,400만달러)과 삼양식품의 면류(2억2,

900만달러), 의료기기 산업(1억800만달러)이 지역 수출을 이끌었다.

시는 올해 고물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손잡고 ‘2023 원주시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수출기업의 세계 시장 확대와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조치다.

시와 도경제진흥원은 △해외 라이브 커머스 운영 △국내

외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 물류비 및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총 8개 분야 단위 사업에 총 2억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백연순 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올해 수출업계의 상황이 세계 경제 둔화라는 대외 리스크 및 국내 내수 부진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며 “활로를 뚫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전략적 판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허남윤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지역 10면

윤곽드러낸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옛 캠프페이지 개발 가능·조치구역 이르면 연말 확정
동내면 인근 다원·학곡지구 연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춘천】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는 지역별로 필요한 절차나 준비 작업 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부터는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앞서 민선 7기 도청사 신축 이전지로 선정됐던 구 캠프페이지는 202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발굴의 상층부 조사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무리돼 캠프페이지

내 개발 가능구역과 존치 구역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서 도청 신청사 건립지 발표 당시 밝혔던 시민공원과 IT, 빅데이터 등 첨단지식 R&D 공간 등 첨단지식산업 및 복합 문화공간 등의 계획도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

또 담보 상태인 동면 노루목 저수지 개발사업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부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접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는 농어촌공사의 매각 입장이지만 공기업으로서 책무도 커 향후 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강북지역의 경우 시는 내부적으로 춘천시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사업 지역을 구 농업 기술 부지 1,985㎡로 정하고 이미 시가 유치한 강원특수교육원 본원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앞서 도와 시는 도청사 신축 부지를 발표할 당시 신사우동을 교육·문화·예술 복합 지구로 만들어 가겠다고며 구 농업기술원 부지에 강원특수교

육원 유치 계획을 밝혔다.

동내면은 도가 지난 7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행정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인근 다원지구, 학곡지구와 연계한 행정복합타운까지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0여년간 지 지부진한 구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가능지역이 확정되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주말까지 평년보다 따듯... 초미세먼지 주의

영서 중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전망

강원도내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등 평년보다 매우 따듯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다.

8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이 전날보다는 내려갔지만 강릉 21.4도, 동해 21.4도, 속초

20.6도, 영월 19도, 정선 18.8도 등 도내 곳곳에서는 연일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돌았다. 강원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기질은 나빠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지역별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춘천 68 $\mu\text{g}/\text{m}^3$, 홍천 65 $\mu\text{g}/\text{m}^3$, 횡성 62 $\mu\text{g}/\text{m}^3$, 화천 55 $\mu\text{g}/\text{m}^3$, 철원 53 $\mu\text{g}/\text{m}^3$, 인제 48 $\mu\text{g}/\text{m}^3$ 등으로 대부분 지역

2023년 03월 09일 (목)

사회 07면

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다. 비가 그치는 9일부터는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반도체연구소 유치 둘러리 안 된다

-대구·경북과 경쟁, 도·대학·정치권 연대해야

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를 대상으로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공모하면서 강원도를 대구·경북과 같은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인구와 기반 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들 지역과 강원도의 경쟁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대구·경북은 여권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어서, 강원도를 둘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정 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국립대학과 강원도, 도 정치권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해 연구소 유치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하는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총 4곳입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포함된 강원·경북·대구를 비롯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개 대학씩 정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벌써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경북대의 경우 IT대학내 전자공학부에 별도로 반도체 전공을 두고 있고, 삼성과의 계약학과인 모바일공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경북대 출신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의식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내 대학은 그동안 여러 사업에서 대구·경북권과 묶여 평가받아왔습

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 결과에서도 강원대와 한림대만 선정대학 명단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대경 강원권'에서 8개 대학이 선정된 수요맞춤성장형의 경우 도내에서는 한림대 한 곳만이 1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연구소 결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TK 지역 대학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자, 강원도내 국립대학들의 유치 의지도 약화하는 양상입니다. 강원대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업에도 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릉원주대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공모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도시 규모나 기존 산업 인프라에 치우치지 말고, 국립대학의 균형발전과 성장가능성까지 포함한 다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학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도와 정치권도 대학에만 유치 활동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연구소는 향후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역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강원발전의 동력을 만든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응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지자체 지역제한 입찰제 더 강화해야

-도산 위기·재고 관리 호소, 관급단가 현실화 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기
술용역 계약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
상금액이 2억2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입니
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3월 7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지역제한
입찰 금액상향 필요성은 근래 지속적
으로 요구돼 온 사안입니다. 물가인상
및 계약금액이 커지면서 매년 수주실
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내 중소기업은 금액상향 조
정으로 수주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
로 기대돼 환영하고 있지만, 더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제한입찰로 인
한 실적은 2019년 23.9%에서 21년에
는 12.4%로 절반으로 급감했기 때문
입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중소기업 보
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발주 때 해당금
액 미만 계약에 대해 그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실효를 보려면 금액을 대폭 올
려야 합니다.

지난달 원주시에서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도
관급 공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한목소리
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관급 공사 수

주 및 물품을 확대해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대체인력 채
용,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등 인력
확충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는 토로
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바로 영세한 지
역업체가 각종 관급 경쟁입찰에서 우
대받는 환경 확대였습니다.

한편 도레미콘조합 및 강릉·동해지
역 업계에서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낮
은 관급 조달 단가로 인해 이종고에 시
달리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줄어들
면서 좁은 시장을 놓고 출혈 경쟁이 벌
어지는 데다가 관급 조달 가격이 낮아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입니
다. 자금난에 봉착해 도산 위기 및 고
용 불안으로 이어지도록 심화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제조
업의 2023년 2월 중 업황 기업경기실
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5p 하락했
습니다. 특히 2월의 제품 재고수준
BSI는 그 전월보다 무려 9p 올라갔기
에 신규 수주실적이 활발해야 지역경
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증
상을 잠시 넘기는 응급처방이 아닌 제
도화를 통해 영세한 제조업과 중소기
업의 자구책을 돕도록 침술형 맞춤형
정책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국민의힘, 이제 혁신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올 2월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전당대회 레이스는 총 7번의 권역별 합동 연설회와 총 4번의 당 대표 방송토론회, 1번의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방송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졌고,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55.10%(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를 기록했다.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흥행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경선은 출발부터 흙탕물 싸움이었다. ‘당원 투표 100%’를 변경, 윤심(尹心) 논란으로 분란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러나 민생 현안이

나 정책 노선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선 막바지 후보들은 8일에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단체 채팅방 2곳에서 김기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민 속으로’라는 대명제를 망각해 생긴 일이다. 보수정당의 미래나 비전, 국가적 의제에 대한 담론은 어디에도 없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 경제에 10년 위기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경험하면서 10년 주기설이 정설처럼 굳

어졌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자 메가톤급 위기가 닥친 것으로 보고 시중에 금과 달러 사 모으기가 유행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가 경험한 초유의 사태였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국가 부도급 재앙이 었지만 경제에 미친 충격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 추락을 막았다. 되레 집값, 주가, 가상화폐 같은 자산시장이 펄펄 끓었다. 수해(水害)가 휩쓸고 간 뒤 전염병이 창궐하듯 돈의 힘으로 떠받친 청구서는 이제서야

날아들기 시작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올바르게 파악해 혁신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의 안보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은 근년

전당대회, 흥행 성공했으나 국민 기대 못 미쳐
보수정당 비전·국가적 의제 담론의 장 못 돼
민생과 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 대책 내놓을 때

들어 연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진된 신냉전 질서는 중국의 대만 군사 위협으로 고조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탈냉전 시대가 가고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 논의가 퇴색하고 ‘핵 있는 평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새 대표로 출범하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며 국가안보에 대한 촘촘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국민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보답한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도내 103명 조합장 당선, 막중한 책임감 가져야 한다

강원도 내 농·축협 79곳, 산림조합 15곳, 수협 9곳의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된 이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조합은 지역경제 및 금융의 모세혈관이다. 새 조합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농산어촌은 도시 지역의 성장과는 다르게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 조합원인 주민들의 살림살이도 20년 전보다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따라서 당선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조합 경영능력은 물론 지역산업 진흥의 중추 역할, 청렴한 윤리의식 등을 발휘해야 한다.

조합장은 해당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을 맡으며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 등 농민 조합원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신임 조합장들은 2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내내 선거 때 조합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정보를 제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조속히 치유해야 한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면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조직의 반목과 불신, 갈등을 봉합하는 일부터 서둘러 나서야 한다. 혹시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간, 경쟁 후보 간 갈등이 있었다면 모두 털어버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낙선한 후보의 선거공약도 우수한 내용은 적극 수용해 조합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자. 낙선인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법이다.

조합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등 협동조합 운영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바람에 현재 우리 농협이 안고 있는 시대적 어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다.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만을 일삼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자산이나 좀 먹다가는 여지없이 도태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한경쟁 시대다. 새 조합장들의 사심 없는 봉사와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